현대불교

제 774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2010년 3월 10일 수요일 (음력 1월 25일 · 불기 2554년 · 주간)

"4대강 거버넌스 구축하자"

불교환경연대·에코붓다, 4대강 심포지엄 열어 대정부 권고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에코붓다(대표 법륜)는 3월 4일 오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4대강 개발사업'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불교계를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시민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인 신경림씨는 격려사에서 "지켜만 보고 있는 우리도 역사의 죄인이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박재완 기자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국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 환경 · 생태 분야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정부 권고를 발표했다.

불교환경연대(상임대표 수경)와 에코붓다(대표 법륜)는 3월 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대강 개발, 다른 대안은 없는가'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관련기사 3면

이날 행사는 환경과 생명의 가치 보존을 중심에 두고 한국불교가 사회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중적 의사를 결집해 4대강 사업 저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 지난 3개월간의 연구 · 토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불교계는 4대강 사업에 대한 대정부 권고를 통해 △국민과 합의 · 동의과정을 거칠 것 △본류에 앞서 지천부터 살릴 것 △법적 절차를 따르고 충분한 환경영향평가조사를 진행할 것 △대안 · 대책 마련 후 신중하게 시행할 것 △시범지역 시행 후 확대 시행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

에코붓다 유정길 대표가 발표한 권고에서 전문가들은 "4대강 사업은 22조원이 훨씬 넘게 투입되는 거대 토목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합의와 동의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4대강과 관련된 지역주민, 시민, 전문가들과 함께 거버넌스(협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문가들은 "홍수피해와 가뭄이 본류인 국가하천이 아니라 지방하천 · 소하천 등 지류에서 발생한다"며 "수질개선과 홍수예방, 수량확보 등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해야 한다면 지류부터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졸속으로 처리된 문화재지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지역주민, 자연과 생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자연과 공생하는 개발을 위해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현 정권의 임기 내 완공하겠다는 욕망을 포기해야 한다"며 "현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사업인 만큼 4대강 사업 시행에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은 일단 시행되면 돌이킬 수 없을만큼 피해규모가 상상을 초월한다. 국가예산 낭비를 막는 등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라도 규모가 작은 몇 곳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사업을 충분히 평가한 뒤 전국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비롯해 前 천주교 수원대교구장 최덕기 주교, 신경림 시인, 이부영 前 국회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격려사에서 "모든 사회 · 자연 · 법률 질서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경제가 나아진 것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 모두 자기위치에서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해 생명을 위협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이웃에 대한 연민 · 사랑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4대강 대안 권고가 받아들여져 우리가 바라는 편안하고 안락한 '정토'가 구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수경 스님은 인사말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개발이라는 거대 국토개조사업을 자신의 임기 안에 완공하기 위해 환경 사회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대규모 개발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교육 · 의료 · 복지 · 지방자치 등 서민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스님은 "불교가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이 돼 4대강 저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자리가 4대강을 실질적으로 살리는 대안을 마련하는 일말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보람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은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의 문화와 자연환경을 담고 있는 4대강을 세계문화유산(세계복합유산) 예비 후보로 등재하기 위해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불교환경연대 명계환 정책팀장은 이번 심포지엄에 참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가칭 사단법인 불교환경문화연구소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6 현장-불레협 율동 ▶14 선지식-법타 스님 ▶8 인터뷰-정호 스님 ▶23 강의실-홍세화

어린이 영어법회? 기반 먼저

포교원 워크숍 "지도자 없다" 이구동성

어린이 법회 모습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법당은 재미없는 곳이 됐다. 어린이 포교에 늘 뒷전이었던 불교계는 90년대부터 어린이불자가 급격히 줄어 이제는 찾아보기도 힘들다.

최근 조계종이 영어법회 교재 <헬로 달마스쿨>을 이용한 영어법회 봉행을 준비 중이지만 3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지도인력 확보 및 양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혜총)은 2월 28일~3월 1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제1회 어린이 영어법회 지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지원 사찰 20여 곳에서 80여 지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영어법회를 진행할 지도자가 없다"는 등 사업 운영에 대한 호소가 가득했다.

영어법회는 영어라는 소스를 넣어 더 맛깔스럽고 재미있게 하는 법회다. 결국 핵심은 영어가 아니라 법회다. 어린이 영어법회 활성화를 통한 새싹 불자 유입으로 어린이 포교활성화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없는 까닭은 무엇일까?

이유정 어린이 영어법회 시범사찰 교육위원은 "어린이 영어법회 지도자는 영어, 불교 실력은 물론 심성교육을 하는 교사로서의 능력도 필요하다. 일선 사찰에서 영어 법회를 하고 싶어도 영어 · 불교 · 심성을 고루 갖춘 지도자가 없기 때문"이라 진단했다.

이에 대해 조계종 국제포교사단 박상필 회장은 "국제포교사의 영어법회 지원이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그동안 영어법회를 진행해온 각 사찰 영어 지도 법사들과의 교류를 확대하고, 국제포교사 차원에서 영어법회 지도자 양성과정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사찰 관계자는 "원력과 신심으로 각종 법회 프로그램, 교재, 교구 등을 개발하고 인력을 양성하고자 해도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종단차원의 안정적 후원만 있다면 영어법회 지도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교정책의 일관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포교원은 2007년 조직된 어린이청소년팀의 운영 시한이 올해까지인 만큼 이를 대신할 '어린이청소년위원회'를 2009년 12월 발족했지만 법적으로 뒷받침할 종령은 검토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계에서는 "영어법회를 비롯해 이제 갓 모심기에 들어간 어린이 · 청소년 포교가 정상 궤도에 오르려면 종단의 전폭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상언 기자

의료비 감면 협약

조계종 · 동국대

앞으로 동국대 병원을 이용하는 조계종 사부대중은 의료비 중 최대 20%를 감면받게 됐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은 동국대(이사장 정련)와 3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의료비 감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이 체결되면 조계종 신도증 소지자는 동국대 동국의료원 산하 5개 병원 이용시 비급여항목 15%, 건강검진 등 20%를 감면 받는다.

또 스님과 목사, 신부, 수녀 등 이웃종교 성직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25%도 감면된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최근 약대를 유치한 것처럼 종단과 동국대가 힘을 모아 신도들과 이웃 종교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불자와 국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